
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안전한 일상, 역동적인 지방,
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-

2024. 3.



행정안전부

순 서

I.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 1

II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

I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 3

I.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- **(지방시대 본격 개막)** 기존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방식에서 탈피, 지역의 자율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 주도 성장의 발판 마련

- 지방시대위원회 출범('23.7월) 지원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('23.11월)
- 강원('23.6월) 및 전북특별자치도('24.1월) 출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특별자치 확대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시행('23.1월)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

- **(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가속화)** AI·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수립('23.4월)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

- 공공마이데이터 적용 확대(~'23년 총 105종) 및 공공서비스(6종) 민간 웹·앱 개방
- 세계 최초 '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' 개발·적용('23.7월~) 등 데이터 분석·활용 확대
- OECD 디지털정부평가(2회 연속) 및 공공데이터평가(4회 연속) 1위 달성, '디지털 네이션스' 주도 등 국제적 위상 공고화

- **(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지속 추진)** 기후 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, 65개 세부과제 충실 이행 및 실전 훈련 실시

-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('23.1월/65개 과제) 수립 및 지속 이행
-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운영('23.10월~)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
- READY Korea 훈련 도입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6년 만에 재개 등 실전형 훈련으로 대응역량 제고

2 개선 필요사항

-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, 지역 여건에 따라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대전환 긴요

-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에도 충실할 필요

-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, 예상치 못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측·대비 및 대응역량도 시급히 보강할 필요

II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대내외 정책 여건

- **(지역발전 패러다임 대반전 필요)** 인구의 자연 감소('23.4분기 합계 출산율 0.65명) 속에서 수도권 쏠림현상*은 더욱 심화
 - * '23.11월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 50.67%(OECD 26개국 중 1위)
- 경제 불확실성 증가,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운용 여건은 '24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☑ 정주민구 증가를 위한 대책 못지않게, 지역별 비교 우위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 필요

- **(안정적 일상 확보 요구 증가)** 고물가·고금리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, 신종 사회재난 우려 확산 및 이상기후 일상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

☑ 약자 지원,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전 확보 등 국민이 중시하는 정부의 기본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

- **(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 공존)**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산망 장애 및 이용격차 등 우려도 증가

☑ 빈틈없는 디지털 환경 구축과 함께, 디지털 약자 등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필요

2 업무 추진 방향

- 임기 반환점을 맞는 해로, 국정과제 핵심성과를 다수 창출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'윤석열 정부 개혁적 변화' 체감 필요
- 행정안전부는 중앙-지방의 가교이자 정부 전체의 행정체계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핵심 플랫폼 기관으로서,
 - 복합적인 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개혁 선도

III. 2024년 핵심 추진과제

비전

**안전한 일상, 역동적인 지방,
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**

문제해결 중심 「행동하는 정부」를 이끄는 행정안전부

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「지방시대 정부」

1.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
2.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
3.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

2 과학과 현장 중심의 「국민안전 정부」

1.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
2.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
3.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·제도 혁신
4.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

3 신뢰와 협업 기반의 「디지털플랫폼정부」

1.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
2.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
3.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

4 서민·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「민생 정부」

1.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
2.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

5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「대통합 정부」

1.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
2. 시대·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

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「지방시대 정부」

1.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"전국 방방곡곡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"
- ▶ "비수도권 거점도시의 발전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"

□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 지원

- (균형 있는 국토 활용) 17개 시·도 및 권역별 특성,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**쏠 국토의 잠재성장동력 현실화**

- (수도권)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^{서울}, 노후계획도시 재정비^{경기}, 내항 개발·개방^{인천}
- (충청권)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^{대전충남},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^{세종},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^{충북}
- (호남권)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^{광주},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^{전북},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^{전남}
- (영남권) 가덕도 신공항 건설^{부산}, 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^{대구·경북}, UAM 클러스터 구축^{울산},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^{경남},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재개^{경북}
- (강원·제주) 광역급행철도(GTX) 강원 연장^{강원},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^{제주}

- (소외지역 발전 지원) 접경지역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(소양호수권역, 유네스코 지질자원권역 등), **외곽섬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*** 등 맞춤 지원

*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, 교통시설 및 수도·전기 공급시설 우선 지원 등

□ 공간적 제약 극복의 동력 마련

- (미래 지방행정체제 준비)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·구역·기능 개편방안 모색

※ ^{가칭}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'를 설치·운영해 주요 의제 논의

※ 지방자치 30주년(25년) 계기, 지방자치 관심 제고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념사업 준비

-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다양한 방식(자치단체 통·폐합, 특별지자체 구성, 메가시티 등)의 행정체제 개편방안도 적극 지원

※ 수도권-부산 양축 구축을 위해 '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' 등 제정 지원

- (지자체 간 협력 확대) '공공협약' 제도 도입으로 협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관할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**주민중심 행정 실현**(지방자치법 개정)

※ 공동·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 유도

2.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직원 정주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됨”
- ▶ “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”

□ 기업과 사람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

- (기업 이전 지원) 기회발전특구로 이전(수도권→비수도권)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(50%) 및 재산세(5년간 100%) 감면* (“24년~)
* 조례로 취득세 50%p 추가 감면, 재산세 추가 5년간 50% 이내 감면 가능
※ 직원 숙소 및 문화생활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해 이전기업 직원의 정주 여건 보장
- (규제혁신 체감도 제고) 준조세 경감, 지역건설산업 애로 해소 등 파급효과가 큰 지방규제 정비 및 규제책임관*을 통한 개선효과 극대화
* 기업이전, 청년창업 등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과 긴밀히 연결된 규제 집중관리
- (정착 환경 조성) ‘빈집을 정비*해 공유사무실·공원 등으로 활용,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신규 취득(세컨드 홈) 시 세부담 완화(기존주택에 1주택 특례)
* 빈집 정비 공모사업 추진(‘24년 50억) 및 빈집 철거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(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을 활용해 납부세액 산출, 3년간 별도합산 유지)

□ 지역 고유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토대 구축

- (특화된 자치권 부여) 특별자치시·도(강원·전북 등)별 여건을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, 기존 특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재조정* 검토
* 특례 활용실태(제주·세종 등)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례항목 및 범위 조정
- (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) 지역 건의 검토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*(인구감소지역법 개정)
* 청년·중장년 정착 지원, 중소기업 및 교육시설 이전 지원 등
- (지역 통계 다변화)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‘생활인구*’, ‘(가칭)지역 특성 MBTI**’ 등 맞춤형 통계자료 개발·제공
* (‘23년) 7개 지자체 시범 산정 → (‘24년) 쉰 인구감소지역 대상 산정
** ①인구, ②입지, ③지역가치, ④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, 16개 유형으로 지역 분류
- (지역특색 활용 시책 확대) 생활인구 확대사업인 ‘고향올래(GO鄕 ALL來)’, 지역특성을 살리는 ‘고향있다(GO鄕it多)*’, 치유지원사업 등 총괄 지원
*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▲소규모마을 경제활력 제고 ▲로컬디자인 ▲전통시장 유인 시설 확충 ▲골목경제 활성화 ▲생활권 단위 활성화 사업인 ‘로컬브랜딩’으로 구성

□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기반 확대

- (민간의 집중투자 유도)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투자자와 연계해 '지역활성화투자펀드' 조성*,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
* 기금 1,000억 원 출자 → 펀드를 통해 약 3조 원(30배) 규모 지역개발 투자 추진
- (고향사랑기부제 2.0) 기부한도 상향('25년~, 연 500만→2,000만원) 및 기부방식 개선(지정기부 도입 등)을 통한 활성화 추진('24.2월 법개정 완료)
※ 전문가 및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법인 기부, 거주지 기부 허용 등 제도개선 연구 지속
- (재정 불균형 완화) 불확실한 경제 여건 및 지역소멸 등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교부기준 개선*(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 개정)
* 재정여건 반영 비중 확대, 복지·교육수요 변화에 맞는 세부지표 개편 등 검토
- (지방공기업 지역 기여 확대) 대규모 자본 필요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*, 투자규모 확대('23년 17.1조→'24년 20.2조)
* 투자영역 확대,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특례(광역기준, 순자산의 300%→350%) 확대, 지자체 간 협의 시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 허용 등

3.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"인구구조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개혁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필요"
- ▶ "지속적인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여 책임성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함"

□ 핵심 자치혁신과제 논의 본격 추진

- (일반-교육자치 연계 발전) 단기 지자체-교육청 간 업무 연계 강화 및 재정구조 합리화, 장기통합적·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 개편 검토*
* 행안부·교육부·시도지사협의회·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('23.8월~) 활용
- (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) 특행기관 분야별 특성, 제약요인 등을 고려한 차별적 정비방안 마련 추진*(중소기업·고용·환경분야 33개 기능)
* 특행기관 기능정비 TF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이양대상 선정

□ 성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지방행정 실현

- (조직 운영 책임성 제고) 민·관 합동 조직진단을 통한 정원 합리화 추진*, 쏠 지자체 기구·정원현황 비교 공개로 자체적인 효율화 유도
* 정원 과다 지자체는 정원효율화 계획 수립,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
- (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)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 통·폐합 지속 추진*, 위험 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**로 재무건전성 강화
* '22~'23년 32개 기관 통·폐합 완료, '26년까지 총 49개 기관 통·폐합 추진
** 유형별 평가지표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(1차) 지정, 재무위험 수준이 높은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(2차)으로 지정·관리
- (이양사무 체계적 관리) 지방이양 완료사무 성과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이양효과 검증, 지방이양 사무관리시스템* 구축('24년)
* 사무배분현황 DB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, 단계별 추진상황 관리 및 의견수렴창구 개설 등
- (지방공무원 경쟁력 향상) 기업-지자체 간 인재 교류 제도화, 행안부-지자체 핵심인재 교류 및 적극행정 활성화 등 지자체 업무역량 강화

□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

- (기금·특별회계 내실화) 지자체 기금 성과평가 확대* 및 특별회계 평가 신설, 성과가 미흡한 기금·특별회계 폐지·정비 권고(지방기금법 개정)
* (현행) 지자체 단위 평가 → (개선) 각 기금별 평가방식 도입
- (안정적인 재정위기 관리) 지자체별 '통합재정안정화기금'* 설치·적립 의무화(지방기금법 개정)로 지방세입 감소 등 경제상황 변화 적시 대응
* '23.12월말 기준 기금 미운영 지자체 19개
- (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) 보조사업자 운용평가 강화,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* 실시
* '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(행안부)'를 통해 고위험사업 중심으로 집중 점검
- (공유재산 적극 활용) '공유재산 총조사' 도입 및 분석·진단을 통해 누락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사용 도모
※ 「공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정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한 운영 추진

② 과학과 현장 중심의 「국민안전 정부」

1.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"CCTV 관제요원 한 명이 수백 대를 모니터링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"
- ▶ "신종재난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에 한계"

□ 데이터 분석과 AI를 통한 위협징후 조기 파악

- (AI 관제로 신속 대응) CCTV 관제(전통시장 포함)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 신속 포착·통보('24년 ISP/11개 지자체 시범운영)
 - ※ 노후·저화질 CCTV 6,100여 대 교체('24년)로 실질적 관제 범위도 지속 확대
 - ※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상황공유를 위해 지자체 관제센터-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간 CCTV 영상정보 공유 근거 마련 추진(재난안전법 개정)
- (빈틈없는 인파관리) 인파관리지원시스템*을 모든 중점관리지역(전국 100곳)에 확대 적용('23.10~12월 30곳 시범운영→'23.12월말 정식 개시)
 - * 인구 밀집도 및 공간 특성(협소도로 비율 등)을 통해 위험도 분석, 관계기관 상황전파
- (침수위험 조기 파악)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*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 및 주민대피경보 자동 전파
 - * 유속·수위 예측 및 실시간 상황 확인('24년 440개소, '27년까지 총 2,200개소 설치 예정)
- (생활 속 위험요인 예측) '안전신문고'에 접수된 신고 데이터(텍스트, 사진 등)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 개발('25.12월 적용)
- (잠재재난 분석 강화) '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'(現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확대 개편)를 통해 국내·외 사례 및 데이터 분석기능* 향상
 - * 예) 맨홀 내 가스폭발,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대중교통·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 등

□ 통합적 데이터 관리로 재난안전정보 접근성 제고

- (안전정보 통합제공) 개별 시스템*(6종)별로 제공되던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'안전24'로 통합하여 위치 기반 원스톱서비스** 제공('25년)
 - * 국민재난안전포털, 생활안전지도,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등
 - ** 내 주위 재난 및 통제상황 정보, 대피소 검색 및 길찾기, 생활안전정보 등
- (재난상황 통합관리)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*(28종)을 '재난관리24' 포털로 연계해 디지털 통합 모니터링체계** 구축('25.上)
 - * GIS기반 상황관리시스템, 풍수해관리시스템 등
 - ** 재난유형 및 기관 필요에 따라 표출정보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상황판 구성

2.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벗어나야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음”
- ▶ “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난피해 규모가 달라짐”

□ 현실성·현장감 높은 훈련으로 위기대응 체질 개선

- (복합재난 실전 대비) 산단 재난, 항공기 사고 등 복잡한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**READY Korea 훈련 실시**(‘23년 2회→‘24년 4회)
※ 시기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‘안전한국훈련’ 지속 시행(연 2회/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 참여)
- (전시대비태세 강화) 핵·드론·사이버테러 등 최근 안보상황을 반영해 **을지연습 시나리오 개선**, 민·관·군 합동으로 지역별 **현장훈련 강화**
※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을 불시로 전환해 훈련 효과 극대화 추진(‘24년~)
- (실전형 민방위훈련) 적 공습·재난 등 실제적 위협에 대비한 ‘**행동 위주의 실전적 훈련**’(‘23년 3회→‘24년 4회)으로 **쏠 국민 비상시 대처능력 함양**

□ 지역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

- (초기 상황대응 강화) 재난상황 **총괄관리제** 도입(부단체장), **단체장 재난대응교육 의무화** 등 지자체 대응역량 제고
- (상시 상황관리) **쏠 시·군·구에 상시 상황실을 구축**해 신속한 상황인지·전파 추진(‘23년 110개→‘26년까지 전체 확산)
- (재난사태 선포 지원) 재난사태 선포권한 **확대***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(‘24.7월,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) 및 사례교육 실시
* (기존) 행안부장관 → (개선) 시·도지사까지 포함(‘24.1월 재난안전법 개정)

□ 유사시 효율성 높은 주민대피체계 도입

- (효과적인 예·경보 알림) 개별 시스템(자동음성통보, 우량경보, 재해 문자전광판, 마을방송 등)의 재난 예·경보를 **통합해 일괄 발령체계***로 개편
* (기존) 시·군·구 개별 발령 → (개선) 중앙, 시·도, 시·군·구 통합·일괄 발령
※ 피해우려지역 내 특별관리대상(고령자 등)은 대피지원단 1:1 매칭 및 119안심콜서비스 연계
- (주민대피시설 통합 운영) 재난·민방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**통합 운영***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 혼선 방지 및 빠른 대피 유도
* 지상에 설치된 민방위대피시설(77개소)은 재난대피시설로, 지하공간이 확보된 재난대피시설은 민방위대피시설로도 활용 → 향후 복합대피시설 구축 추진
- (지진 감지체계 개선) **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지진 시 신속 대응**(이상수치 등 계측기 오류여부 자동확인시스템 시범운영, ‘24.10월)

3.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·제도 혁신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마을이 저지대라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나 붕괴 걱정으로 밤에 잠 못 자는 날이 많음”
- ▶ “새로운 형태의 재난은 소관이 불분명해 전담기관 지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됨”

□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

- (위험사면^{斜面} 관리 강화) 붕괴위험 급경사지* 발굴·정비,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(산림청 협업) 및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피해 예방**
 - * 미등록 급경사지 2만 개소('24~'25년, 매년 1만 개소) 추가 발굴 예정
 - ** 산사태 위험성평가 및 피해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, 실증사업 추진 등('25년, R&D)
- (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) 시설별 담당자 지정(~'24.5월) 및 전면 통제 의무화(15cm 침수시),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*('24년 201개소)
 - * 지하차도별 위험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입차단설비, 경보알림장치 등 설치
- (침수취약도로 선제 관리) 자동 차단·경보시설 조기 설치(~'24.7월, 180개소)

□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고려한 자연재난 대비체계 개선

- (선제적 가뭄 대비) 지자체 가뭄대책* 수립 의무화(자연재해대책법 개정), 섬 지역 비상급수 대상 대폭 감축**('23년 4,190명→'24년 3,000명 목표)
 - * 제한급수 및 물 절약 대책, 인력·장비 조달대책, 주변 지역과의 협력방안 등
 - ** 상수도 연결, 해수담수화, 저수댐 확장공사 등을 통한 수원 확보 추진
- (풍수해 예방기준 개선) 이상기후를 고려해 관계부처(농식품·국토·환경부 등) 공동연구를 통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
- (재해영향평가 고도화) 대규모·고밀도 개발 증가에 대응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·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* 추진(재해영향평가법 제정)
 - * 재해영향평가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등 현장 이행강화, 전문연구기관 신설 등

□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정부 재난관리역량 강화

- (사회재난 관리체계 개선)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*(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제·개정)를 통한 책임성 제고
 - *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28종 유형 신규 지정, 기존 유형은 재정비해 사각지대 해소
- (신종재난 초기 대응 철저) 사전 미규정된 재난·사고 발생 시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개입*해 초기 민생현장 불편 최소화
 - * 예) '23.11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본부 신속 가동
- (산불신고 신속 전달) 산불 신고정보(112·119)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산림청에 즉시 공유하여 상황 파악시간 절반 이상 단축(기존 약 4분 → 변경 1분40초)

4.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

< 현장 목소리 >

▶ “단순히 영상만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할 때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의 효과도 더 크므로,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함”

□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일상안전교육 대폭 강화

- (학교 체험교육 활성화)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확대*, ‘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’ 확대 운영 등 조기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
* (‘23년) 188개교(유초·중고·특수) → (‘24년) 500개교 → (‘25년) 1,000개교 목표(교육부 협업)
- (체험시설 확대)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(現 7개소, ‘24년부터 7개소 추가건립 착수)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·보급(어린이 우선이용 추진)
- (어린이 안전문화 확산) 안전일기쓰기 사업 확대 및 그림일기 공모전 개최, ‘어린이 히어로즈’(주변 위험요소를 스스로 신고) 운영

□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- (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)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나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신종·유사 놀이시설(무인키즈풀 등)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(‘24.上)
※ 학교폭력 예방·대비용 교내 CCTV와 지자체 지능형 관제시스템 연계 추진
- (통학로 안전시설 확충)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(보도) 확보(‘24년~) 및 AI 스마트 횡단보도(어린이 인식, 보행신호 자동 연장) 설치 확대(매년 100개소)
※ 통학로 주변 방호울타리 지속 설치(매년 200개소)
- (승강기 안전수준 향상)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(‘24년 75.2억, 1,061개소), 인증 위반 여부 현장조사*(표본) 실시
* (‘23년) 13대 시범 실시 → (‘24년) 400대 (매년 신규 설치 약 4만 대)

□ 주민 주도의 촘촘한 안전관리체계 확립

- (자율방재단 활동 확대) 자연재난에 한정된 자율방재단 활동영역을 사회재난까지 확대, 감염병 방역,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에 적극 참여*
*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內 관련 규정을 재난안전법으로 이관 추진
- (안전신고) 주민이 참여하는 계절·지역별 ‘집중신고제’*(안전신문고 활용)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인 발굴 및 사전 예방조치 강화
* (봄) 산불, 지역축제·행사장 / (여름) 풍수해, 물놀이·수난사고 / (가을) 산불, 등산·산책로 안전 / (겨울) 대설, 동파, 화재 등

3 신뢰와 협업 기반의 「디지털플랫폼정부」

1.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

< 현장 목소리 >

▶ “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다가, 전산망 장애 때문에 발급을 못 받아 불편했음. 다시는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필요”

□ 장애 예방을 위한 상시적 관리 강화

- (상시 모니터링) 주요 정보시스템(1·2등급) 24시간 상시관제 수행, 디지털안전상황실(‘23.12월~)을 통해 범정부 통합모니터링 시행
- (위험분산 구조 적용) 장애 발생 시 他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‘장애 격벽’ 설치* 및 인증시스템 장애 대비 인증수단 다양화**
* 정보시스템 간 네트워크 영역 분리 / ** 모바일 신분증, 민간 간편인증 등 활용
- (체계적 점검) 범정부 표준 예방점검체계 도입(필수 점검항목·기준 마련), 정보시스템 중요도 및 장애 경중 판단을 위한 등급제 전면 개편

□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국민불편 최소화

- (범정부 거버넌스 강화) 행안부 중심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민관합동 장애원인조사단을 운영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·관리 내실화
- (신속한 복구) 장애 상황 통합관리·신속 전파(디지털안전상황실), 중요 장애 발생 시 민관합동대응반 전문인력 즉시 투입
- (서비스 연속성 확보) 행정·민원서비스 무중단을 위한 ‘업무연속성 계획’ 수립(‘24.下), 대국민 안내기준 및 불편 접수 표준절차 마련

□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

- (정보시스템 효율화) 이용도가 낮고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을 통·폐합(‘26년)하고, 절감된 예산은 1·2등급 시스템 보강에 활용
- (정보화사업 제도 정비)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공공정보화사업 여건 개선(과기정통부 협업), 운영·유지보수사업의 전문성·연속성 강화*
* 유사 사업 통합발주, 2~3년 이상 장기계약, 사업자 위규사항 제재 강화 등
- (인프라 개선) 1·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(41%→100%) 및 오류 가능성이 높은 노후장비(약 61%) 순차 교체

2.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 번 재방문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김”
- ▶ “서류를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서 발급받는지 몰라, 링크를 타고 다니며 반복해서 로그인하다 보니 번잡스러움”

□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원점 재검토

- (공공부문)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로화*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폭 정비('25년까지 2,145건)
 - * 출산·육아·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민 이용이 빈번한 업무부터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업무 지속 확대('24년 421종 추가, '26년까지 1,498종에 적용)
- (민간부문) 본인 행정정보 관련 서류 제출 없이 더 많은 민간 서비스 신청*이 가능하도록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확대
 - * 예) 통신사에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 시 본인행정정보 제출 생략

□ 접속절차·시간 최소화로 쉽게 해결되는 공공서비스 제공

- (온라인창구 통합) 이용 빈도 높은 주요 서비스*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('25.上), 그 외 서비스는 화면 표준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계**
 - * 교육부, 복지부, 고용부, 국세청 등 4개 기관의 주요 서비스에 우선 적용 (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신청, 사업자 등록조회,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등)
 - ** '24년 400종 → '25년 900종 → '26년 1,500종(누적) 적용 목표
- (간편 로그인) 민간ID 등 원하는 수단으로 한 번 로그인하면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'Any-ID 정부통합인증체계' 적용*
 - * 정부24, 소통24, 국민비서 시범 적용('24.6월) → 복지로 등 30여개 공공웹 연계('24.下)
- (간편 신원확인) 모바일 신분증 확대('24년 재외국민증, '25년 주민등록증 등), 민간 앱(삼성페이 등)에서도 발급·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
- (민간 플랫폼 활용) 네이버, 카카오, 토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웹·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* 확대
 - * ('23년) KTX·SRT 승차권 예매, 자동차검사 예약 등 6종 개방 완료 / ('24년) 여권 재발급 신청,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 신규 개방
- (디지털지갑 도입)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, 고지서, 신분증 등을 민간앱·웹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'디지털지갑' 구현('24.12월)

□ 선제적 알림과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인 공공서비스 구현

- (혜택알리미 개시) 개인별 상황·조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* 시범 개시('24.12월)
 - *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및 지자체 출산축하금·출산용품 지원 안내, 청년 독립(월세정보 확인) 시 청년월세 지원 혜택 안내 등
- (지역형 국민비서 도입) 기존 국민비서 '구뻐'에 지역 정보를 가미해 지역별 생활정보, 취약계층·사회적 약자 지원정보 등 추가 제공*(24.11월)
 - * (기존) 건강검진, 자동차검사 일정 등 전국 일괄 안내 → (개선) 지역별 청년지원 정보(일자리, 주거 등), 지역별 출산·육아·임신 복지정보 등 지역형 알림서비스 추가
- (등록 누락된 주민 적극 발굴) 행정기관에서 개별 가구에 대한 각종 현장조사 시 등록 누락 주민 여부도 함께 조사*하는 방안 추진
 - * 출생신고, 주민등록, 외국인등록 등 누락자 인지 시, 조사원이 관할청에 통보

□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민원제도·환경 구축

- (오프라인서류 온라인화) 인감증명서(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용도에 우선 적용, '24.9월) 및 행정서비스 11종* 온라인 신청·발급 실시('24.4월)
 - * 제대군인 확인서, 재외국민 출국신고,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등
- (민원실 체류시간 단축) 모바일 앱을 통한 '온라인 예약제' 도입,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서식 작성 간소화*로 민원인 시간 절약('25년)
 - * 반복 기재사항(이름, 주민번호 등) 자동 입력, 오류 자동점검 등
- (민원서식 작성 도우미) 주요 서식에 작성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*를 삽입, 나이·국적 관계없이 쉽게 작성하도록 개선
 - * 작성 예시자료 및 동영상 제작하여 연계,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본 마련
- (범정부 민원·행정제도 정비) 각 기관마다 달리 사용하는 행정 서식·용어 등을 표준화* 및 간소화**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
 - * 예) 외국인 성명 표기방법 통일 등 / ** 행정서식에 간편이름 부여 등
- (어디서나 민원처리) 지역·관할기관 관계없이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접수할 수 있는 민원 종류 확대(수요조사를 통한 대상 선정)

3.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말은 업무 중 수기로 반복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업무 처리 부담 가중”
- ▶ “민간에서 잘하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도 빠르게 도입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”

□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원팀 정부 운영

- (부처간 협업 강화) 범부처 차원 국정과제·사업 등 협업 필요 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·정원 운영* 지원, 성과평가 연계(정부혁신평가 반영)
* ①부처 간 교류·파견정원(협업별도정원 100명 사전승인), ②다수부처 협업형 임시 조직 운영, ③다수부처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등
- (인력 운영 효율화) 비효율 분야 감축인력*의 국정과제·긴급현안 재배치,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확대로 국정현안 대응력 강화
* 5년간('22~'26) 총 5,473명 감축 추진('24년 1,090명)

□ AI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

- (단순업무 효율화) 문서 작성, 검색을 지원하는 'AI 행정비서'('24.4월 시범 운영), 회의 내용을 문자로 변환하는 'AI 자동회의록'('24.3월)으로 신속 업무처리
* 정보공개 청구내용 요약 및 악성·일반청구 구별, 민원답변서 초안 작성 등 지원
- (공통기반 마련) 쏠 부처가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'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'* 구축 추진('24년 BPR/ISP)
* 중복 개발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방지, 서비스 표준화 등을 위해 구축

□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사회문제 신속 해결

- (공유·분석) 범정부 데이터 공유·활용을 위한 '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' 구축('25.3월),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제 지속 발굴
- (패키지·통합 개방) 연관된 데이터는 패키지 형태로, 지자체별 상이한 형태의 데이터는 통합 제공*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
* 예) 전국 공영자전거 데이터(서울 따릉이, 대전 타슈, 세종 어울링 등)
- (이용 편의성 증진)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'차세대 공공데이터 포털' 구축('24.12월), 데이터 구독 서비스* 등 도입
* 데이터값 변경 발생 시, 이용자에게 선제적으로 알림 제공

④ 서민·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「민생 정부」

1.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착한가격업소 업주 등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함”
- ▶ “건전재정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도,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은 필요”

□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력 제고

- (착한가격업소 활성화) 지정 확대('23년말 7,172개→'24년 1만 개 이상) 및 배달료 지원*, 이용객 인센티브 제공(캐시백 등)으로 외식물가 안정 도모
* 외식업소 약 5,000개소 대상으로, 연 2백만원 지원 추진(국비 30% 지원)
- (소상공인 금융지원) 지역맞춤형 금융협력모델*을 적용한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 추진
* 지자체·새마을금고·지방은행 등이 협력하여 지역현실에 부합하도록 ①이차보전형, ②특례보증형, ③복합형 등의 유형으로 소상공인 금융사업 기획
- (지방계약 입찰 시 우대) 영세 창업기업, 소기업·소상공인은 낙찰자 결정 시 과거 납품실적을 10% 가산 반영('24.上, 행안부 예규 개정)
- (풍수해보험 활성화)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동반 가입 시 보험료 지원, 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전액 지원(기업 사회환원사업 연계) 등 가입 촉진

□ 실생활 속 체감도 높은 지방세제 개편과제 발굴·시행

- (출생가구 주거 지원)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(가액 12억원 이하, 500만원 한도) 시행(지방세특례제한법 既개정)
- (서민·취약계층 주거 안정) 서민·취약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도록 세제혜택 강화* 추진('24년 법개정)
* ①서민주택(1억 미만, 40㎡ 이하) 취득세 면제 연장, ②임차 중인 소형·저가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 他 주택 취득 시에도 생애최초 감면 자격 유지
- (장애인·유공자 생활 지원) 생계활동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생활·보철용 자동차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 연장 추진('24년 법개정)
- (자동차세 형평성 확보) 現 과세기준인 배기량 외에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 검토*
* 미국과의 FTA 준수 여부 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 발표 및 입법 추진('24.下)

2.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"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, 체계적 대응 필요"
- ▶ "사고 후 유가족 지원사항을 타 유가족에게 공유받아 신청한 적 있는데, 명확한 안내 필요"

□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조기 파악 및 지원 강화

- (AI 활용 위기가구 관리 강화) AI콜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선별하는 모니터링시스템* 시범운영(네이버·SKT 등 협업, '24년 4개 지자체)
 - * 위기징후 정보(단전·단수, 요금체납 등)를 활용해 선별된 가구에 전화 자동발신, 지자체 복지담당자 방문 전에 긴급상황 등을 미리 파악 가능
 - ※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복지정보를 배달하면서 위기징후 파악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 확대(우정사업본부 협업, '23년 60개→'24년 100개 지자체)
- (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) 체납사유·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안내, 정보시스템을 활용*해 복지사업과 연계
 - * 체납처분 내역, 재산현황·거주실태, 생활자금원천 관련 정보를 차세대지방세입정보 시스템 →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에 제공

□ 재난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현장형 지원책 마련

- (원스톱 지원) 대형재난 시 기관·분야별 분산된 내용(장례·치료·보상 등) 통합 안내 및 소통창구 일원화, 피해자·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*
 - * 전담공무원 매칭 등 재난관리자 업무지침 마련 및 전 지자체 배포('24.7월)
- (이재민 주거 개선)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급형태 다양화*, 공급 방식 변경(지자체 제작·공급 → 임차 후 공급)을 통한 신속 지원
 - * (현행) 1세대당 24㎡(방1+거실1 고정) → (개선) 세대수, 필요공간 등을 고려해 '방1+창고1', '방2+다용도실1' 등으로 다양한 모델 제공
- (폭넓은 피해복구 지원)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 개선*(재난안전법 개정) 및 농·축산 분야 피해지원 확대방안 검토(농식품부 협업)
 - *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
- (신속한 시설 복구)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*(24.2월 환경영향평가법 既개정, 환경부 협업)
 - *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복구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

5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「대통합 정부」

1.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이웃 간 돕고 챙기는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꿔줄 수 있음”
- ▶ “서로 나누고 돕는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비영리단체의 투명성, 신뢰가 중요”

□ 온기를 전달하는 나눔·상생의 문화 확산

- (‘온기나눔’ 범국민운동) 다양한 기관·단체에서 개별 진행하는 기부·자선행사를 공동 슬로건으로 통합 홍보하는 등 **국민 나눔분위기 확산**
※ 범국민·지역별 추진본부 구성(23.12월), 설·추석 연휴 등 집중 홍보를 통한 전국 확산
- (자원봉사 활성화) 자원봉사 거버넌스 플랫폼 정비*, 자원봉사 시스템^{1365포털} 고도화(他 시스템 연계 등) 및 인센티브(인정·예우 등) 강화
* (자원봉사센터) 민간중심성 강화, 운영 프로그램 확대 / (민간협의회) 기능·역할 강화
- (기부문화 확산) 기부의 날·기부주간(12월2주) 운영 등 정부 역할 강화, 기부금품 범위 확대(현행 금전·물품+추가 유가증권) 등(24.1월 기부금품법 개정)

□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

- (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강화) ‘읍면동 안전협의체’*를 통해 민원·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안전수준 제고
* 이·통장, 자율방재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재난 대비 예찰 활동, 쪽방촌·반지하 주택 방문 등 수행
- (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관리) 지역별 치안수요의 특성을 반영해 민·관 협업*으로 지역사회 내 상호 돌봄문화 조성 지원
* 반려견 순찰대 등 주민 체감형 자치경찰 현장 시책사업 발굴·공모

□ 민간 분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 제고

- (민간보조사업자 투명성 강화) 중앙-지자체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*, 부정징후 패턴(가족 간 거래, 지출증빙 미비 등) 모니터링
* 중앙(e나라도움)-지방(보탬e) 간 사업정보 연계 및 중복사업 검색체계 마련(24.上)
- (의연금품 관리 개선) 의연금 수입·지출 구분이 용이하도록 별도 회계로 분리, 재해구호협회 지도·감독 근거 신설(24.1월 재해구호법 개정)
- (기부금품 사용 투명화) 전용계좌 의무화 및 모집기간 명확화, 사용결과 세부내역(사용처명, 목적 등) 공개 등을 통한 신뢰성 제고

2. 시대·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, 앞으로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함”
- ▶ “나와 다른 사람’을 인정할 수 있으면, 출산을 저하에도 불구하고 사회 유지에 큰 도움”

□ 공명선거(22대 총선)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

- (범정부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) 관계기관(선관위·총리실) 협조체계 유지 및 선거상황 공유 등 원활한 선거 진행 지원
- (선거사무 지원) 수검표 도입 등 투·개표관리절차 개선에 따른 지자체 지원* 및 협조체계 강화, 선거중립 교육·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
- *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(권역별), 투·개표관리 인력 관련 협의 등

□ 아픔을 보듬고 희생을 기억하는 발전적 과거사 해결

- (국외 희생자 명예 회복) 일본, 러시아, 태평양 지역 등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* 지속 추진
- * '23년말 기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24,305명 중 봉환 완료 6,046명(24.9%)
- (진상규명·보상) 제주4.3사건 희생자 보상('22~'26년/'24년 2,496명) 및 여순사건 진상조사·자료분석, 5.18민주화운동 관련자 8차 보상*
- * 보상금 신청자('23.7~12월) 1,982명에 대한 심의 및 보상금 지급('24년)
- (기억과 치유)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('24년)해 민주화운동 기록 수립·보존 및 민주주의 연구, 시민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
- ※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적 고통 치유 및 원활한 회복을 위한 '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' 출범('24.5월, 광주)

□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

- (외국인주민 지원) 외국인주민의 지역 의제 참여 강화방안 모색 및 지방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*
- * '외국인 업무 지침서' 발간·배포('23.12월),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굴·확산 등
- (북한이탈주민 포용) 자유·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이북5도 위원회 기능 개편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*
- * 이북도민과의 자매결연 및 기업체 연수, 남북이음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